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국회의장 선거 당원 20% 반영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당원주권국 신설 권리당원 입김 강화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 정지·귀책사유 재보선에 무공천' 조항도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를 위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과 맞물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 대표가 여전히 쥐고 있어야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고, 당

내 경쟁구도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만일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사·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맨 왼쪽)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 법안 3건 공동 발의

민형배 의원, 희생법원 설치·'김홍빈 대장법' 등 대표 발의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 3건을 공동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광산) 국회의원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전원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물꼬' 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희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난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해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훈·포장을 받으면 국가가 사건·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광주시 산악연맹을 상대로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한 김 대장의 사고 수습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악연맹과 동료 대원에게 비용 일부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전액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3건의 법안은 빠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광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핵심 현안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버스 정류장에 휠체어 진입 불가...개선 시급"

김정이 전남도의원



가능한 정류장이 적지 않은데도, 이들 시설 개선 조치에는 소극적이라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예를 들면 무안군 남야 전남도청 앞 버스정류장 경우 휠체어로는 진입조차 불가능해 휠체어경사판을 갖춘 최신 저상버스가 오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순천 송촌아파트 버스정류장도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하기 어렵게 설치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전남지역 버스 정류장 이용 실태를 꼼꼼히 파악해 시설 개선에 나서는 등 저상버스 확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정류장 시설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정이(민주·순천8) 도의원은 최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매년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버스 정류장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42억원을 투입, 62대의 저상버스를 사군에 도입토록 했고 올해도 128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저상버스를 도입하더라도 버스 이용이

이재명 "남북 모두 패배자 되는 치킨게임 중단해야"

北 오물 풍선·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국지전·전쟁 비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규탄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해왔다고 촉구해왔다"면서 "남측의 민간 단

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배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다.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또다시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면서 "그러면 다시 또 남측에서 북측에 열매 대응사격, 북측이 또 남측을 향해 더 큰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것이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양측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 당국이 과연 국민의 안전,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이 든다"면서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